

나비 효과

정 범 진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카오스(Chaos) 이론에서는 유명한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가 빈번히 인용된다. 과연 북경에서 나비 날개의 펄럭임이 뉴욕의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는 흔히 증폭에 증폭을 거듭하여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성숙도가 낮고 사물에 대한 균형 감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의 증폭을 이겨내지 못하여 비논리적이고 우스꽝스런 파국을 자초하기도 한다.

더 많이 알게 되면, 단점도 많이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단점이 부각되는 이유가 친밀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양자가 성숙되지 않았다면 친밀해진 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 요즘 시대에 적절치 않은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상급 기관과 산하 기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당사자의 성숙도가

부족하면 남만 못해질 수 있다.

한술밥을 먹은 식구끼리도 감정의 발로를 제어하지 못하면 남보다도 못한 관계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알고 지낸다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고 만다. 하늘이 준 인연을 낭비해 버린 것이다.

행정은 사람이 한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다. 성숙된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고 남의 감정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감정에 감정으로 맞서지 말아야 한다. 과학이 발전하고 편이성이 증진되어도 우리의 감정적인 발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흔히들 첫 번째 연인은 이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감정적인 비롯됨으로 인해 잃게 마련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감정을 지나치게 확대시키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된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되고

나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가 늘어나고, 연구 개발이 확대되고,
원자력산업의 지평이 넓어지고, 국제 사회에서 인지도가 증진되어도
감정의 발전은 이를 따르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혹은 그럴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발전도 수반되어야 한다.

주책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된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면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 또 죄에 대한 지나친 응징을 하게 되기도 한다. 균형 감각을 상실하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를 불태우는 일도 생긴다.

어떤 사회나 감정은 오가게 되어 있다. 원자력 사회의 경우에도 감정은 있다.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기관 간의 감정도 있다. 또 이에 따른 마찰도 있다. 또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균형 감각은 갖추어야 한다.

사회가 성숙되면서 감정적인 발로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전도 같이 성숙한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대표를 뽑을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한 표를 가지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은 선출된 소수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 혹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하여 무지한 다수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원자력의 주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더욱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마찬가지로 행정 체제 또한 성숙될 필요가 있다. 나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역량 있는 사람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났다. 소위 '정책적 결정'에 의한 추진은 항상 '실무적 난관'에 봉착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부메랑 효과가 따른다. 이제는 될 일은 되어야 하고, 되지 않을 일은 되지 않아야 한다.

한 식구로 뭉쳐서 서로 돕던 시대에는 제도나 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소위 무위(無爲)가 가장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제도와 형식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가 늘어나고, 연구 개발이 확대되고, 원자력산업의 지평이 넓어지고, 국제 사회에서 인지도가 증진되어도 감정의 발전은 이를 따르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혹은 그럴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발전도 수반되어야 한다. ☞